

## 23.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 발의일자 : 2023년 9월 27일
- ☐ 발 의 자 : 이재화, 김재용, 김지만,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윤영애, 이영애, 이재숙,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하중환 의원
-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 ☐ 상정일자 :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3년 10월 16일),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재화 의원)

- ☐ 제안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10조)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현)

#### □ 제안취지 및 적법성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사료됨.

#### □ 주요 검토사항

#####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 안 제1조(목적)는 본 조례안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여 용어의 정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였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에게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이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였음.

#####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제4조)

- 안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는 시장은 법 제6조8)의 기본계획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구청장·

8)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 등에게 통보해야 함을 규정함.

○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위원회는 임기의 정함이 없는 비상설 위원회로 규정하였는데, 주요 심의사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화학안전계획의 수립과 화학사고대응 계획의 수립·변경 등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 7월)에 따르면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둘 것을 권고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필요한 경우 적시에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안 제6조)

- 안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은 안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 추진 상황, 법 제12조9)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하는 정보 중 대구시 관할구역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음.

9)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의무 규정(안 제12조)

- 안 제12조(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는 시장에게 법 제23조의 4<sup>10)</sup>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토록 하였음.

## ○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안 제13조)

- 안 제13조(교육·훈련)는 화학물질 관리 담당공무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자 등에게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소방서 등 화학사고 관련 기관과 사고 대응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임.

## ○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관련 사업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14조)

- 안 제14조(재정지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과 관련된 기관, 단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절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 위해나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7조의2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17개 시·도 중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 전국 17개 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정현황

지 역	제정일	지 역	제정일	지 역	제정일	지 역	제정일
서 울	'18. 1.	부 산	'16. 2.	대 구	미제정	인 천	'15. 5.
광 주	'16. 3.	대 전	'19. 6.	세 종	'21. 9.	울 산	'17. 8.
경기도	'13. 8.	강원도	'19. 5.	충 북	'15. 1.	충 남	'18. 4.
전 북	'15. 10.	전 남	'16. 7.	경 북	'20. 4.	경 남	'17. 12.
제 주	'22. 1.						

- 다만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이며 시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필요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 향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의 건강,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li> <li>◦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가 환경부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이에 대한 매뉴얼을 사전에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원활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장에 교육기관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이수 여부도 관리하고 있음.</li> <li>◦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상황 전파, 주민 대피이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li> </ul>

##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